

# 연구노트

-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스웨덴, 영국, 한국을 중심으로  
홍 승 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젠더적 관점의 휴먼뉴딜 방안  
변 화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스웨덴, 영국, 한국을 중심으로

홍 승 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맞벌이가족의 확대와 일가족양립정책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족(dual earner family)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족생활, 특히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취업을 중단하거나, 자녀출산을 연기하거나 최소화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별로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일-가족의 양립(Work-Family Balance) 혹은 일-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실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결과로 각 국가의 개별 근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가족양립의 현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정책의 시행실태와 근로자들의 일-가족생활 양립의 경험과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자녀양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의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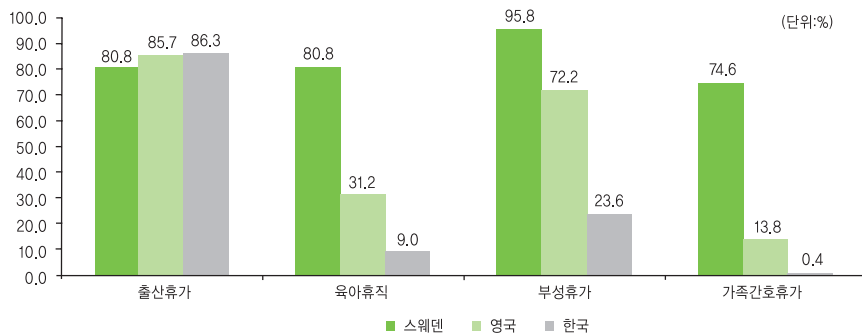
각 국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립의 문제는 부모의 취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문제이다. 우선, 이들의 자녀양육 형태를 비교해 본 결과, 보편적 보육서비스가 발달해 있는 스웨덴에서는 보육시설을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76.2%), 영국은 배우자(38.8%) 혹은 친인척 양육(33.0%)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친인척(27.6%), 유치원(20.3%), 배우자(19.6%)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영국과 한국에서는 보육시설이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스웨덴과 영국에서는 배우자 양육이 가장 많은 반면, 한국의 경우는 친인척 양육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부모휴가를 사용하면서(80.8%)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사용보다는(31.2%) 비취업 배우자나 배우자의 파트타임으로의 전환 등으로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사용률도 극히 낮게 나타났으며(9%), 부모의 장시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주로 친인척에 의해 자녀양



육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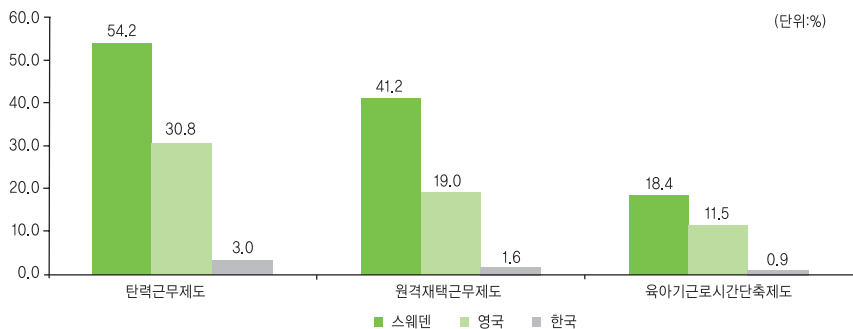
한편 3개국 근로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 가족간호휴가 등의 사용실태를 비교해 본 결과, 스웨덴에서는 4가지 휴가 모두에서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었고, 영국의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부성휴가에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출산휴가의 사용률은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제도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1〉 3개국 근로자의 휴가제도 사용경험



노동시간정책은 탄력근무제도, 원격·재택근무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직무대체제도의 3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3가지 영역에서 스웨덴의 이용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제도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향후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3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정책 사용경험



## 노동생활과 가족생활

3개국 근로자들의 1일 전체 노동시간을 유급 노동시간과 무급 노동시간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급노동시간은 스웨덴(472.22분), 영국(419.75분), 한국(501.53분) 등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돌보기 및 학습도움에서는 스웨덴(57.31분), 영국(78.75분), 한국(56.43분), 요리 및 집안일에서는 스웨덴(76.65분), 영국(67.37분), 한국(30.94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성은 유급 노동시간은 스웨덴(424.26분), 영국(395.79분), 한국(499.68분) 등으로 나타났고, 자녀돌보기 및 학습도움에는 스웨덴(81.29분), 영국(120.43분), 한국(111.90분), 요리 및 집안일에서는 스웨덴(117.28분), 영국(98.45분), 한국(95.28분)등으로 나타났다. 즉 스웨덴, 영국, 한국 모두 유급노동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총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남녀의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뿐 아니라 3개국 중에서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3개국 근로자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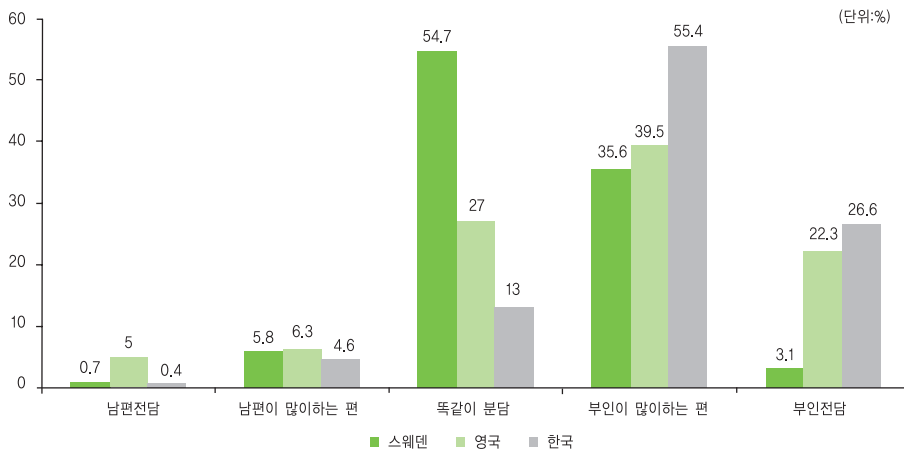
## 가족내 성별역할 분담

또한 가족내 성별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스웨덴의 경우는 똑같이 분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과 영국은 부인이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55.4%, 64.8%로 높게 나타났다. 즉, 스웨덴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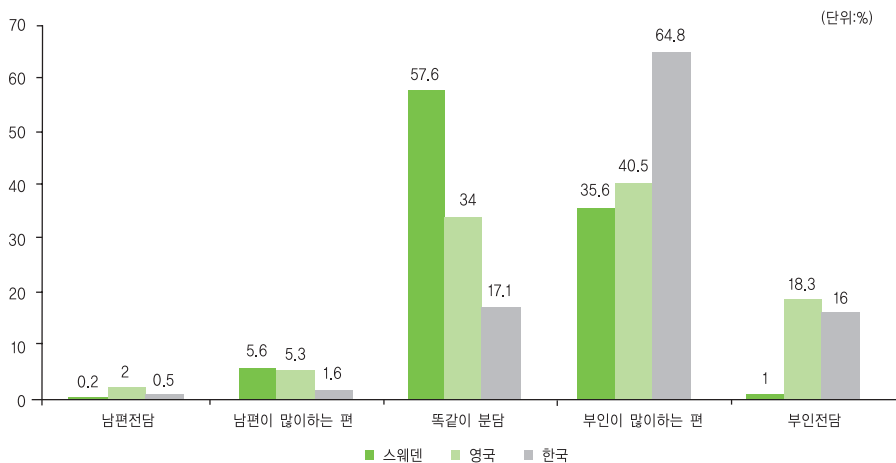


로자들이 가장 양성평등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고, 한국의 근로자들이 가장 불평등하게 가사분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여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 3개국 근로자들의 배우자와 가사분담: 요리 및 가사



〈그림 5〉 3개국 근로자들의 배우자와 가사분담: 자녀양육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족시간을 지내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다. 평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스웨덴 근로자의 경우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9%로 가장 높았지만, 영국

과 한국은 모두 2시간~ 4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3%, 42.0%로 가장 높았다.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빈도는 스웨덴의 경우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81.1%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은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28.3%로 3개국 중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근로자들이 가족시간의 물리적 양도 가장 적을 뿐 아니라, 평일에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빈도도 매우 낮아 가족시간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과 여건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3개국 근로자의 가족생활 비교

		스웨덴 (n=413)	영국 (n=400)	한국 (n=800)	$\chi^2$ (df)
평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없음	2(0.5)	0(0.0)	6(0.8)	408.359*** df=8
	1시간 미만	4(1.0)	5(1.3)	85(10.6)	
	1시간 ~ 2시간 미만	18(4.4)	83(20.8)	264(33.0)	
	2시간 ~ 4시간 미만	125(30.3)	193(48.3)	336(42.0)	
	4시간 이상	264(63.9)	119(29.8)	109(13.6)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빈도	거의 매일	335(81.1)	271(67.8)	226(28.3)	370.359*** df=8
	일주일에 2 ~ 3회	58(14.0)	93(23.3)	354(44.3)	
	한달에 3 ~ 4회	6(3.9)	26(6.5)	133(16.6)	
	한달에 1 ~ 2회	3(0.7)	5(1.3)	36(4.5)	
	거의 없음	1(0.2)	5(1.3)	51(6.4)	

## 향후과제

3개국의 정책이용 조사결과에서 스웨덴의 제도사용률이 높게 나타난 스웨덴 사례는 제도 성숙도에서의 국가별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성숙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성과지표들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며, 따라서 지속적인 제도발전과 제도의 실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 또한 영국의 사례에서는 일부 제도(출산휴가, 부성휴가, 탄력근무제도)에서 시행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점 역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즉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의 경우에는 인지도와 시행률에서 다른 제도에 비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결과는 제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준다.

또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중요한 장애는 장시간노동관행의 만연화, 적절한 가족시



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 가족내 평등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적절한 시간배분과 동시에 적절한 가족시간의 확보가 노동생활과 가족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Family Day” 캠페인은 가족시간과 가족생활을 마련해 가기 위한 실제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의 시간과 책임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퍼플 잡(Purple Job)” 논의와 보다 긴밀히 연계되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젠더적 관점의 휴먼뉴딜 방안

변 화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원에서는 2010년 협동연구과제로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협동연구기관으로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국 East-West Center와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 휴먼뉴딜 정책 개발의 필요성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는 중산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Human New Deal(이하 HND라 한다)’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휴먼뉴딜’ 정책이라 함은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인적자원 발전 투자 관련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대다수가 여성가구주임을 감안할 때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빈곤의 원인 및 실태 파악 그리고 대책방안 마련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경제위기 이후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여성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관련 연구는 미비하였다. 또한 노동 분야, 복지 분야, 건강 분야, 가족/문화 측면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젠더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더더욱 많지 않다.

2008년 총 비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의 경우 여성이 61.4% 남성은 38.6%로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 보다 빈곤가구율이 3배나 높으며, 여성가구주의 가구원이 남성가구주의 가구원 보다 빈곤률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라 함은 대상별(노인, 여성, 아동 등) 혹은 경제생활수준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근로자(working poor)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문화부문, 노동부문, 복지부문, 건강부문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빈곤에 대한 외국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중요하다. 가족·문화부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노동의 부문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이렇게 다학제적으로 빈곤에 접근하는 연구배경은 다음과 같다.





- 가족·문화부문: 가족 내 역할관계 및 중심가치의 변화는 이혼, 별거,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야기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여성가구주의 빈곤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학력자본 및 사회(관계)자본의 부재는 후세대로의 빈곤대물림 문제로 이어져 청소년의 미래성장에 큰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빈곤화의 과정을 가족생활측면과 함께 청소년의 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노동부문: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인한 여성의 고용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빈곤문제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여성의 접근이 어렵다. 그리고 최저임금수준의 근로빈곤현상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잠재인력 상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력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고용안전망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 사례 분석이 한국 노동시장에 갖는 함의는 매우 크다. 일본은 경제위기 직후 자민당 정부 시절에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제2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민주당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성격 및 구조, 노동시장 환경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변화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복지부문: 경제위기 이후 남녀간 소득차이는 더욱 심화되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들면서 빈곤 여성의 수, 특히 여성가구주, 한 부모가구 및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복지제도 개선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 건강부문: 경제적 어려움의 장기화는 여성이면서 취약계층일수록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제한은 신체적 질환의 악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알코올중독 및 자살충동 등의 정신건강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건강(의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통합적, 젠더적 관점의 연구 필요성

노동, 복지, 건강, 가족/문화 분야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실태조사가 따로 이루어져 분절적이며 비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가져왔다. 분야별 취약 계층에 대한 조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종합적 측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복지, 가족/문화, 건강 분야를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그러한 조사의 결과로 나온 정책은 성인지적 정책의 부재로 남성보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인지적으로 노동, 사회문화, 복지, 가족, 건강 분야의 상호연관성을 인지하기 위한 다학제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소주제별의 독립적인

부문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다학제간의 협력의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노동 분야인 경우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근무 환경은 남성과 차별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정규직 및 서비스직 구성이 높은 여성에게는 더욱 노동 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 그러한 노동 환경은 사회문화 및 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복지, 가족 분야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아동 양육은 보육지원 뿐만이 아니라 세금, 주거, 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상호연관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동 보육문제에 국한하는 정책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젠더적 관점에서 성인여성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건강 분야의 경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및 서비스직 여성 근로자의 직장 환경, 직무요구도, 직무자율 등은 남성과 상이하여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한 일가정의 양립, 성희롱 및 성폭력,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등은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에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 복지, 가족/문화, 건강 분야의 취약계층 구조와 형태면에서의 변화 및 사회적 결과를 기존 패널자료 분석을 통하여 경제위기 이후의 취약계층의 힘든 상황을 성인지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의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향후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대비하고자 한다.

### 휴먼뉴딜 및 빈곤의 개념

정부는 “휴먼뉴딜”의 표제하에 중산층 탈락방지 및 진입촉진, 미래중산층육성 등 종합적 중산층 육성대책의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다양한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가는 기존의 사후적, 잔여적, 소극적인 사회정책을 넘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특히, 빈곤 감소 및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의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인적 역량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HND가 지향하는 사회는 사회안정과 균형발전의 기반인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상향적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폭넓은 성장이 가능한 사회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예방적/투자적 접근이다. 자생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역량 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인적역량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융합적 접근이다. 기존의 사회정책은 각 정책영역(보건, 복지, 교육, 노동 등)의 사업단위별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업간 중복 및 누락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HND는 각 정책영역들을 융합서비스를 통해 포괄적인 인적역량(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역량)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도 수요자를 직접 지원하는 voucher방식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공급기관들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셋째, 생애주기별 접근이다. 각 개인이 처한 위험과 집중개발이



필요한 인적역량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생애주기별로 정부의 역할이 상이하다. 따라서 HND는 빈곤으로 인한 인적역량의 결핍을 완화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학령전기, 학령기, 생산활동기 및 노년기)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빈곤의 정의는 입장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적 정의로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즉,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라 한다. 빈곤의 정의는 특정 시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핵심내용은 “자원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치 않은 상태”와 “빈곤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을 체현”하는 것이라 한다.

첫째, 절대적 빈곤 개념이다.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수준을 설정하여 그 소득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적 빈곤으로 규정한다.

둘째, 상대적 빈곤이다.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균소득(mean income) 혹은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설정한다. 주로 국제사회(선진국)의 빈곤을 측정시 활용되며 단순히 빈민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해 줄 뿐, 빈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정책적 노력의 효과에 관계없이 빈곤이 규정된다.

셋째, 주관적 빈곤(라이덴 방식)이다. 스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빈곤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빈곤감은 百人百色이어서 모든 개인의 상대적 욕구를 반영한 최저생계비 설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넷째, 정책적 빈곤이다. 정부의 빈곤대책에 대한 각 부처간 권력관계 및 사회의 여러 NGO들과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통 정책담당자의 정책적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인 재정적 측면의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빈곤이다.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론적 측면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빈곤선(poverty line)에 부여된 많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일 빈곤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연구추진방법

문헌 연구로서는 젠더적 관점에서의 Human New Deal 정책 분석을 위한 관련 논의 및 자료를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 복지, 건강, 가족/문화 각 분야 관련 논의 검토 및 취약계층 관련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평가, 대책방안 관련 정책 동향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원자료 2차분석으로는 여성가족패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패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YRBSS) 등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분야별 구조와 특성 및 사회적 안전망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가계조사를 활용한 성별·연령별 빈곤 및 불평등 실태와 동향분석,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여성 가구주가구, 노인가구등의 생활실태 심층분석, 노동패널과 고령자연구패널(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활용한 사회계층 이동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수준 변화분석, 교육고용패널(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청소년패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를 활용한 부모의 사회계층 이동에 따른 취약계층의 아동의 건강 및 건강행태 변화분석을 하고자 한다.

2차 자료 분석연구로 진행된 취약계층의 분야별 구조와 특성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과 기능, 한계와 과제 도출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한다.

또한 연구진행 상황 보고 및 관련 정책동향 반영을 위한 정부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례포럼을 운영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결과의 질 제고 및 연구결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관련 학회와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노동, 건강, 복지, 가족/문화 각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구분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 지표와 지수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한 젠더적 관점에서 취약 계층의 향후 안전망 구축과 다학제간의 통합적이며 젠더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향후 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중산층으로의 진입 및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의 전락을 막기 위한 Human New Deal 정책 방안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